

생전 사죄 안했던 盧...광주·전남은 용서하지 않았다

광주시·전남도, 국가장 기간 조기 계양·분향소 미설치 5·18, 시민단체, 정치권 '국가장 결정' 규탄 한목소리

광주·전남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노 전 대통령은 진실된 사죄도 5·18의 진실에도 입을 굳게 닫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할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기 계양과 분향소 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월 단체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국가장 예우 방침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자 사회 저해하는 선택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동안 5·18 피해자 와 시·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조기를 계양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의장은 성명을 통해 "광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의 조기 계양 및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과 김 의장은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으며 발표 명령 등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생전에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 5·18 진상 규명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과 오월 가족들과 행방불명자들을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 지도자들의 역사적 책임은 생사를 초월해 영원한 것"이라며 "전두환 등 5·18 책임자들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고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 됐지만 5·18 피해자 분들과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조기를 계양하지 않고 분향소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5·18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유감을 표명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라며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논란에 대해서도 "5·18 진상규명 과정에 있는 이때 시민 학술 책임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국립묘지 안장은 단순한 애도·추모 이상의 국가 폭격과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노씨는 대통령이기 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반란의 수괴"라며 "이런 노씨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어서 국가

장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인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광주진보연대도 "5·18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에게 국가장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피 흘리며 지킨 민주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짓밟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태우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을 총괄로 무참히 학살했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짐승 어린 사죄와 참회없는 학술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전남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유해는 관련 법(내란죄 안장 불가)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광주·전남 민변 "노태우 국가장은 역사 부정"

"정부는 국립묘지 안장 논의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데 대해 광주·전남 법조인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선택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노씨는 전두환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무고한 광주시민들

을 죽인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씨는 2011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고, 5·18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끝내 진실을 감췄다"고 비판했다.

노씨가 유언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자평하고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노태우의 민낯이다. 국가장은 노씨의 유언과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를 범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행법이 명확한 이상 국가장을 치르더라도 노태우 씨의 국립묘지 안장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노씨를 예우하는 것은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끝난 5·18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선택"이라며 "올바른 기준 없이 정치적 필요를 좇는다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한국의 갯벌' 세계적 관광명소 만든다

신안서 기념식...순지사 "전남, 대한민국 생태수도 토대"

전남도와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등재기념식을 27일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열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명소 육성을 다짐했다.

'한국의 갯벌'은 신안을 비롯해 순천·보성, 전북 고창, 충남 서천 등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올해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로 모래 갯벌 육지부에 사구가 발달해있고 방풍림이 분포하고 있으며 배후에 염전과 논, 경관이 뛰어난 자연 송림이 있다.

연간 300여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이자, 고동, 게, 조개류 등 대형저서동물 2천150여종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다.

독일·네덜란드 외딴해를 비롯해 미국, 중국 갯벌과 다른 생태환경을 가진 것도 세계유산 등재의 한 이유다. 전체 유산구역은 12만9천346ha이고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남지역 갯벌이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기념식에서는 잠정목록부터 세계유산 등재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노력한 8개 광역·기초 지자체, 국내 전문가,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참여

인원을 90명으로 제한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전문가·지역주민 감사패 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4곳은 등재 이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 지위에 걸맞게 체계적 보존·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 통합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한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기념식에서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의 보고로 전남이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한국의 갯벌'의 진정한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자치경찰제 활성화 업무협약 지역사회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열렸다. 북구와 북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이날 협약은 올해가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인 만큼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학교폭력 예방 등 각 분야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광주북구 제공)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방향 모색

광주시의회, 초광역 생태·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제안

호남의 물길인 영산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능성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는 27일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사)광주마당, 광주경실련, (준)영산강포럼, (재)지역문화교류효남재단, 희망사다리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해 영

산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수 한신대 초빙교수는 한강이 서울의 상징이듯 영산강을 광주의 상징 장소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영산강 문명의 발상지이자 한국문화의 보고인 신창동 선사유적공원과 시민의 숲, 산동고 일대 40여만 평과 장기적으론 군 공항 이전부지 중 일부를 국가정원으로 추가 조성해 영산강 생태도시

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산강 물길을 따라 광주, 장성, 담양, 회산, 나주, 영암, 목포를 연결하는 초광역 생태·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은 "광주전 시대에서 영산강 시대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영산강 유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영산강 경제벨트 구축 및 영산강 유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영산강 그린대 비전 및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친수 공간 조성, 환경생태 보전 등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목적이야 취지를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희기자

슬기로운 가스보일러 생활

안전점검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세요!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나 보일러제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철 막음조치

동절기 가스보일러 안전

☑ 보일러 배기통 이발 확인

배기통 연결부가 빠져 있으면 배기가스가 새어나와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배기통 피그리집 확인

배기통이 피그리집거나 막히면 과열, 배기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배기통 내부 물질 제거

배기통 내부가 막혀 있으면 불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정연료 수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미래